‘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국민의힘 불참…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韓 “국정 민주당과도 협의”, 李 “국힘은 범죄정당”
전국적 국민저항 커져 향후 국정운영 차질 불가피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해버려 의석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야당으로부터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3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5명 부족해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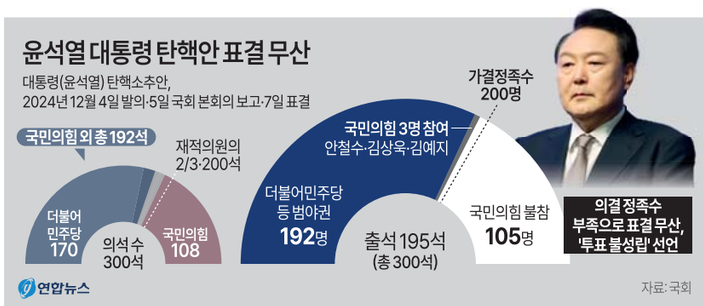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에 따라 8일 0시 48분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자,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뤘다. 이에 오후 6시18분 표결 시작 3시간 만인 9시22분에 투표가 종료됐다.

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표의 말과 달리 향후 국정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저항이 커지고 있는 데다, 야당 대표도 국민의힘을 내란에 동조한 ‘범죄 정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며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윤석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7일 시간대별 상황

12월 7일 새벽	심야까지 이어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유지 결정
9시 38분께	대통령실, 윤 대통령 오전 10시 생중계 대국민 담화 예고
9시 38분께	우원식 국회의장, 언론에 보낸 공지 통해 본회의(오후 5시)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선처리 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의사일정 확정 예고
오전 10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 사과 및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방안 여당에 일임하는 내용 발표
오전 10시 5분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담화 이후 윤 대통령 조기퇴진 불가피·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한 상황 언급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오전 10시 30분께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자간담회,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 담화 비난 및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대국민 담화 비난 입장문 발표 등
오전 중	한덕수 국무총리-한 대표가 총리 서울공관에서 긴급 회동,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수습책 논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파행
오후 1시~	보수성향 단체, 광화문 일대 집회
오후 3시~	민주노총 주축 진보성향 단체,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 등 집회
오후 5시 직전	국민의힘 의원총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오후 5시께	국회 본회의 개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취지 설명 후 회의장 퇴장 등 여당 의원들 잇단 퇴장
오후 5시 30분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
오후 5시 30분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 표결 진행. 여당 의원 퇴장으로 무기명 투표 약 3시간 가량 지연
오후 9시 20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 종료
오후 9시 25분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200명) 부족으로 표결 무산.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 표결 참여, 투표 불성립
오후 9시 40분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표명
오후 10시 30분께	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안 재추진. 11일 발의·14일 표결 거론

연합뉴스

정족수 못 미친 ‘투표 불성립’, 尹 탄핵안이 다섯번째

2015년 국회법 재의안, 2018년 文정부 개헌안도 투표 불성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정족수 미달로 표결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19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가 도입된 이후 다섯번째 ‘투표 불성립’ 사례로 남게 됐다.

첫번째는 지난 2015년 7월6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행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다.

이 개정안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부쳐졌는데,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 160명이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않았다.

두 번째 사례는 2018년 5월24일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된 헌법개정안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표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불참했다.

2020년 5월8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된 국민발안제도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 118명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은 불참했다.

같은 해 12월9일 본회의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당시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문제는 이 법안이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연관된 법안이었다는 점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놓았던 국민의힘은 투표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며 항의했고, 김 부의장은 ‘투표 불성립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된 이날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러 차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호소하며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114조 2항을 읽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는 모습에 세계가 놀랐는데,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것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안의 무기명 투표에는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만 참석했다. 우 의장은 오후 9시26분 투표 불성립을 선언, 다섯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민주 “尹 탄핵안 일주일마다 재추진”

11일 발의·14일 투표 거론…일사부재의 피해 ‘쪼개기’ 임시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것과 관련해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재발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안건이 부결될 경우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 최대한 회기를 ‘쪼개기’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이 ‘지금 일정대로라면 1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11일에 재발의를 하고, 토요일인 14일에 표결을 시도하게 되나’라고 질문하자 “대략 그런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진수 기자

▶1면 ‘내란 아직 제압되지 않았다’서 계속

김 최고위원은 또한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면서 “핵심적 내란 가담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계엄 내란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 관계가 취약하다”며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는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연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며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韓·韓, 헌정질서 파괴 대통령 권한, 사유물 아니다”

이재명, ‘얼굴 바꾼 2차 내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투표가 불성립한 것을 두고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